

권성동 삼고초려, 새 비대위원장에게 '5선' 정진석 추대

“尹정부 성공 위해 집권여당 안정화”
상임전국위 통해 추인 후 마무리
이준석, 새 비대위 가치분 신청 예고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5선 정진석 의원이 낙점됐다. 당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정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안건을 추인했다. 8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정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되고, 새 비대위원 추인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추인받았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추인은 의총에 참석한 75명의 의원이 손뼉 치면서 이뤄졌다. 다만 당 설명에 따르면 김용 의원은 명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추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진석 부의장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집권여당을 안정시키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에 대해 밝혔다.

이어 “당원 총의를 모아 하루 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고, 당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겠다”며 당 내홍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지금 비대위원장은 독배라고 하는데,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새 비대위원장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당초 정 부의장을 낙점했지만 여러 차례 고사했고, 외부 인사도 “우리 당에 대해 잘 모른다”며 완강하게

고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고사한 뒤 다시 정 부의장을 찾아가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계속 설득했고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승낙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 부의장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8대 국회 당시 정의화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주선 부의장이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당초 권 원내대표는 박주선 전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거절하면서, 정 부의장에게 다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거절한 외부 인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대한 가치분 신청도 예고하면서다. 권 원내대표

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가치분 신청” 검토 중이라는 말도 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나선 데 대해 “소수 권력자가 가진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 같은 당헌 찬탈 쿠데타를 ‘공정 쿠데타’, ‘친위쿠데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새 비대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선형 가치분 결정은 당원의 총의를 모아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임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 개정을 만들고, 총의 수렴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비대위 제출범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일련의 비대위 출범 및 당헌 개정안 의결 과정은 헌법·정당법·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野, ‘金 특검법’ 발의… 주가조작 등 의혹 규명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총 100여명 이내 특검팀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 통보하고 전날(6일)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 등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당은 김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특검법안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다.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진 원내수석은 “특검법안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이고 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본인의 허위 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비나컨텐츠 재임 동안 수 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당시에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외에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은 “대부분의 수사인력과 공무원이 현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돼 일하게 될 텐데, 그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 친인척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에서 3분의 1을 파견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존속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수사기간 70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30일 추가 연장해 최대 120일이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 원내수석은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다. 야당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실시된 바 있는데, 당시 특검 추천은

역시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내린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246개 정부위 손질… “지출 낭비 최소화”

대통령실, 모든 위원회 전수 점검

대통령실이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해 총 636개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 정부위원회를 정비해 불필요한 지출과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설치되지만, 많은 위원회가 부실한 운영, 기능 중복, 고비용 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530개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28개가 증가해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79개가 늘어난 637개로 계속 증가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위원회는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협의체 등 다른 형태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는 대체하는 방식으로 정비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2개월간 민관합동진단단의 검토를 거쳐 정부의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

했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의 구체적인 정비방안으로 금년 6월 말 기준 총 63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의 39%인 246개를 정비한다.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중 13개인 65%를 정비하고, 국가교육회의·국방경제협력위원회 등 존속 기한이 만료된 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4개 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부처에서 운영하기 적절한 3개 위원회는 부처로 소속을 변경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건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일시적 2주택’ 종부세 개정안 본회의 통과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표결에 부처 처리하고 정대화,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 추천안도 처리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적 245석,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시분부터 적용돼 일부 종부세 납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5일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담았다. /박태홍 기자